

한국 사회의 친일(親日) 논쟁*

- 그 떨쳐야 할 업장(業障) -

신복룡**

국문초록

이 글은 해방 80년을 맞이하면서 한국현대사의 비극이었던 친일 문제를 되돌아보고자 쓴 글이다. 일제시대를 논의하는 현대사의 무대에서 친일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그리 흔치 않다. 지금의 친일 논쟁은 먼저 태어난 무리의 슬픔과 나중 태어난 무리의 행운의 차이일 뿐이다. 당시의 친일에는 악의적인 행동도 있지만 생계형도 많았다. 친일 논쟁이 할퀴기의 역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의 현실에서 친일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째, 당사자와 그 후손이 진심으로 참회하고 용서를 빌며, 둘째, 친일의 댓가로 얻은 반대급부를 환수하며, 셋째, 국민적 합의로 일몰제(sunset law)를 실시하며, 넷째, 연좌제를 폐지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친일 문제의 마지막 교훈으로, “망국은 스스로의 책임”이라는 맹자(孟子)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주제어 : 식민 통치, 친일의 성격, 친일 청산, 우리 안의 친일

투고일 : 2024.12.01. 심사 마감일 : 2024.12.18. 최종 게재 확정일 : 2024.12.20.

* 이 글은 기왕에 써놓은 필자의 원고에 새 자료를 보완하여, 「대한민국 과거사 정리의 나아갈 방향 : 한국 사회의 친일 논쟁과 떨쳐야 할 업장(karma)」, 한국진실화해위원회(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OK) 주최, “History and Future Direction of Settling the Past in the Republic of Korea,” in International Forum for Sharing the Results of Uncovering the Truth in History : A Path toward National Integration and Reconciliation(Koreana Hotel, November 7, 2024), p.1-13을 Proceeding의 포맷에 맞추어 다시 쓴 것임.

**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shinbokryong@naver.com

I. 머리글

글 머리에 나는 묻고 싶다. 도대체 역사란 무엇일까? 카아는 “대화”(dialogue between the past and the present)라 했고(Carr, E. H. 1961, 24), 토인비는 “윤회”(輪回, cartwheel)라 하고(Toynbee, A. J. 1973, 267~277), 신채호(申采浩)는 “나(我)와 너(非我)의 투쟁”이라 했고(신채호 1977, 14), 공자(孔子)는 “교훈”(告諸往而知來者)이라 했고(『論語』 「學而」), 셰익스피어(W. Shakespeare)는 “흘러간 것의 서막”(prologue)이라 했다(Shakespeare, W. Tempest II: 1).

그러나 나는 역사란 “길”(way)라고 말하고 싶다. 과거는 “지나온 길”이고, 미래는 “가야 할 길”이다. 그 긴 길에는 수많은 굽이가 있었고, 고저가 있었다. 그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평화로운 때도 있었지만 고난의 행군도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산 시대가 역사에서 가장 격동의 시대였다고 불평하며 회상하는 경우가 있다. 지난날 보다 지금의 현실이 더 절절하게 우리에게 와 닿기 때문이다.

그런데 평화로운 때는 비교적 다툼이 없다. 평화의 시대 동안이나 그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평화에 대한 가치가 그리 절박하지 않다(Weber, M. 1977, 109). 그러나 격동에서 벗어난 방금의 시점에서는 다툼이 많다. 원망, 회한, 복수심, 굴욕감, 책임의 추궁 등이 이성을 마비시키며 적과 동지로 나뉘어 다투기 시작한다. 그리고 가장 크고 무겁고 치열하게 다가오는 화두가 곧 망국(亡國)이다. 군중은 자신의 허물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역사를 추궁한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나?

꼭 같은 망국의 문제라 하더라도 천 년 전의 망국보다 어제, 곧 우리의 기억과 체험 속에 남은 망국의 문제에 대하여 민중은 더욱 가혹하다. 당(唐)나라에 의한 고구려의 망국, 몽골(元)에 의한 고려의 망국, 청(淸)나라에 의한 조선의 망국이 있었지만 유독 일본에 의한 대

한제국의 망국이 더 아프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망국의 기간에 사람들은 각기 절의(節義)와 순응(順應)과 부역(附逆)의 길을 간다. 누가 절의이고 누가 부역인가는 식민지 지배의 가혹성, 기간, 그리고 개인의 야망이나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많은 사람이 부역의 길을 갔다.

고대 로마의 고사 한 편을 소개하고자 한다. 『플루타르코스영웅전』 「코리올라누스(Coriolanus) 편」에 이런 일화가 나온다.

로마의 집정관 코리올라누스는 선정을 베풀고 로마의 국위를 선양했으나 귀족들의 모함을 받아 반역 죄인이 되어 추방되었다. 그는 복수를 하고자 적국인 볼스키족(Volski)의 족장 툴루스(Tulus)를 찾아가 병력을 요구했다. 툴루스가 기꺼이 허락하자 코리올라누스는 볼스키족을 이끌고 자신의 조국 로마의 정복에 오른다. 이때 한 노파 코리올라누스 앞에 나타난다. 바라보니 자신의 노모였다. 그는 며느리와 손주들을 데리고 아들 앞에 나타나 이렇게 말한다.

“네가 조국을 유린하려거든 이 어미의 시체를 밟고 넘어가라.”

코리올라누스는 차마 조국을 유린하지 못하고 돌아가 볼스키족의 손에 비참한 최후를 마쳤다(신복룡 역 2021).

영국왕 엘리자베스 1세(Elizabeth I)는 이 대목을 읽고 깊이 감동하여 셰익스피어를 시켜 사극 『콜리올라누스』를 쓰게 했다. 『플루타르코스영웅전』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이 대목을 읽노라면 조국이 무엇인가를 새삼 느끼게 된다. 사실 알고 보면 조국은 속지주의(territorialism)이다. 조국은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국이라는 말 앞에 숙연해지며 솟구치는 열정을 느낀다. 2002년 월드컵축구를 응원한 전국의 시청자 가운데 오프-사이드(off-side)를 정확히 안 사람이 몇이나 될까? 드물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날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조국을 외쳤다. 5천 년 역사에 그런 감격이 일찍이 없었다.

역사에는 조국에 대한 그런 열정의 대오를 비껴가는 사람들이 많았

다. 그 변명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혹독한 식민지 지배 정책에 대한 굴복, 지난 시절 부패한 왕정에 대한 환멸, 신문명의 신기함, 독립이 불가능하리라는 절망감, 그리고 반세기에 걸친 세뇌와 길들임 등으로 말미암아 일제 말엽이 되어서까지 독립의 열망을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비분강개함이야 누구에게인들 없었을까?

그로부터 해방된 지 80여 년이 흘렀다. 이러한 시기에 일본에 대한 시각을 달리한다는 것이 마음 편한 일은 아니다. 시대의 조류를 역류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것인가를 나는 잘 알고 있다. 목청을 높여 반일을 외쳐야 하는 것이 곧 애국인 세상,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소녀상을 세운 데 대해서 누구도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시대이다. 태극기를 가슴에 달거나 애국가를 부르는 것도 친일이라고 진보는 말한다. 왜냐고 물었더니, 태극기는 친일파 개화당이 만든 것이고, 애국가는 친일파 안익태(安益泰)가 작곡한 것을 친일파인 태극기 부대가 패용한 탓이라고 그들은 나에게 말한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 참으로 힘에 겹다. 이제 누구인가는 말해야 하지 않을까?

일본에 관하여 긍정적인 말을 하거나 글을 쓰면 “토착 왜구”로 몰려 온갖 고초를 겪어야 하는 시대에 살면서, 친일파와 같은 민감하고 금기된 문제에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이 얼마나 거칠고 무례한 저항을 받는가를 나는 겪어본 적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친일의 문제를 좀 더 냉정하게 고민해 볼 것을 제안하며 이 글을 쓴다.

이 글의 논리는 릭비(Andrew Rigby)의 『과거 청산의 비교정치학』에 제시된 모델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릭비 2007). 릭비는 영국의 코벤트리대학(Coventry University) 평화와 화해연구소(Centre for Peace and Reconciliation Studies)에서 종족 분쟁을 연구했고, 특히 팔레스타인 문제의 해결에 심혈을 기울인 학자로서 현재는 그 대학의 종신교수로 재직 중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친일의 본질을 정교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도대체 친일이란 무엇일까? 이에 관한 정치학계의 선행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고, 다만 국사학계에서 독립운동 연구자들 사이에 몇 편의 연구가 있을 뿐이어서 정치사 연구에는 큰 참고가 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의 주장을 인용하면 친일의 본질은 아래와 같다.

- (1) 의도적으로 일본의 이익을 위해 동족에게 피해를 끼쳤는가?
- (2) 동포에 대한 피해와 관계없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위해 협조했는가?
- (3) 그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재산이나 신분상의 편익을 받았는가?
- (4) 그 과정에서 일제로부터 사기와 고문이나 위협과 같은 강박이 없었는가?

적어도 지금의 현실에서 친일 문제를 보는 독립운동사학계의 보편적 시각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 (1) 민족을 위해 큰일을 했다는 사실이 그보다 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허물이 애국 활동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다. 허물과 공로는 총량(總量)이나 경중(輕重)을 헤아려 산술적으로 상쇄되는 것이 아니다.
- (2) 먼저 잘못을 저질렀으나 뒤에 회개한 무리[前非後改]보다 먼저 훌륭한 일을 했으나 나중에 잘못을 저지른 무리[先善後非]의 잘못이 더 크다.
- (3) 똑같은 폭압의 상황에서 벌어진 허물이라 할지라도 지도층의 허물은 하층민의 허물보다 더욱 준엄하게 묻는다.

II. 우리 안의 친일

일본의 집요하고도 구체적인 정한(征韓) 전략과는 달리 그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그렇게 절박하지도 않았고 전략적이지도 않았다. 그 밑바닥에는 중화주의(中華主義)라고 하는 백내장이 깔려 있었다. 합방 이전이나 이후를 가리지 않고 지배 계급의 전략 부재로 말미암아 한국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일본에 길들여가고 있었다. 친일을 저지르면 서도 그것이 친일인지도 모른 채 익숙해지고 있었다.



〈그림 1〉 러일전쟁 직후 일본군을 환영하는 한국인과 현수막

출처: 徐宗懋. 2023 『日帝朝鮮 稀貴 寫真集: 1910-1945』(臺北: 新世語文化有限公司) 28-29, 34-35.

위의 사진을 보자. 러일전쟁(1904-1905)에 승전한 일본군이 을사조약(1905)이 체결되고 서울에 입성하자 한양 백성들이 “환영”(歡迎) 현수막을 걸고 그들을 맞이하고 있다.

망국의 분노는 보이지 않는다. 1926년, 이완용(李完用)의 장례식 운구 행렬은 십 리를 이루었고, 고종(高宗)의 국장 이후 가장 화려(?)

했다. 제국대학을 졸업하고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하여 군수나 판사가 되어 “다쿠시”(taxi)를 타고 화신백화점에서 쇼핑하는 일에 사람들은 부러운 눈길을 보내고 있었다.

우리 안의 친일은 오늘이라고 해서 나아진 것이 없다. 그 한 사례로 우리 사회에서는 언제인가부터 느닷없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온 “따오기 복원 운동”(2010)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당시 예산이 72억 원이었다. 그리고 위정자도, 국민도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고 있다. 이 문제는 먼저 그 노랫말을 살펴보는 데에서 시작해야 한다.

보일 듯이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따옥 따옥 따온 소리 처량한 소리
 떠나가면 가는 곳이 어디메이노
 내 어머니 가신 나라 해 돋는 나라(1절)
 내 아버지 가신 나라 달 돋는 나라(2절)

이 노래의 핵심어(keyword)는 처량함,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떠나감, “동쪽의 해/달 돋는 나라”이다. 왜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는 동쪽에 해와 달이 돋는 나라[일본]에서 살고 있을까? 왜 우리는 그토록 처량하게 해와 달이 돋는 나라를 그리워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 이 노랫말에 담긴 메시지는 유쾌하지 않다. 작사자가 어떤 의도로 그렇게 썼는지에 관한 생각은 독자의 몫이다.

나는 이 가사에서 교묘하게 은폐된 친일을 느낀다. 따오기의 학명이 *Nipponia nippon*이라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따오기는 꿩과 까마귀와 함께 일본의 세 국조(國鳥)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일본이 중국에서 따오기를 수입하여 복원한 것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 모르고 했다면 무지요, 알고 했다면 기군망상(欺君罔上)을 한 것이다. 이 사례를 통하여 우리는 입으로 친일 청산을 외치면서도 실상 친일에 대하여 잘 모르거나 알게 모르게 익숙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2〉 일본의 운동 경기 중 막간에 나오는 순간 간접 광고

또 다른 경우로 〈그림 2〉 사진을 보자. 이 사진은 일본이 자기 나라에서 개최하는 한일 운동 경기를 TV에서 중계하면서 중요 장면을 슬로우 모션으로 다시 틀어줄 때 잠시 0.5초 동안 비춰주는 화면이다.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장면을 정지 상태에서 촬영해 보면 해당 사진이 나온다. 첫눈에 알아볼 수 있는 육일승천기(旭日昇天旗)이다. 사람들은 무의식중에 이를 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 수 없지만 이 간접적인 순간 광고는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 뇌리에 깊이 인식된다. 이 의미를 아는 한국인 시청자는 많지 않다. 저들은 우리의 머릿속에 이렇게 파고들고 있다.

우리는 무엇이 친일이고 우리 몸 안에 얼마나 친일이 깊이 각인되어 있는지도 모른 채 반일을 외치고 있다. 우리는 친일 청산을 요구하면서 으레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 5적과 합방 7적의 이름을 거론한다. 물론 그들이 역사에 지은 죄를 사면받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들이 망국의 원인의 모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논리가 친일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논리로 인용된다면 그것은 나의 진심이 아니다. 젊어서 일곱 가지를 잘했으니 말년에 세 가지 잘못된 일을 덮어달라고 말하는 이른바 선선후과(先善後過)의 무리가 있다. 애국과 친일은 이런 식의 상쇄가 가능한 수학 문제가 아니다.

고문 경찰 김태석(金泰錫)과 노덕술(盧德述)을 잡아다가 정죄(定罪)하고 이광수(李光洙)나 최남선(崔南善)에게 낙인(stigma)을 찍는 것이 친일 청산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그러나 50년 가까운 일본 지배 기간에 “민족에게 죄짓고서도 처벌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역사의 죄과(罪科)이다. 이는 어떤 논리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일이다.

Ⅲ. 먼저 태어난 자의 슬픔과 늦게 태어난 자의 행운

해방정국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문제는 친일파 청산이었다. 친일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진다. 역사가 반드시 정죄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묻지 않을 수도 없다. 격동의 해방정국에서 분출하는 복수심과 망국에 대한 추궁의 심리 속에 모두가 애국자처럼 외치는 동안에 이미 이성은 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니었다.

더욱이 해외파 민족주의자들은 일본의 축수 안에 머물렀던 국내파 민족주의자들에 견주어 더 몸짓이 거칠었고 목소리도 컸다. 그 가운데 김구(金九)가 자리 잡고 있었다. 김구는 1945년 12월 27일 “3천만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방송에서 친일파에 대해 언급하며 이런 말을 남겼다.

“적지 않은 협잡 정객과 또 친일본자 민족반역자들을 숙청하여야 한다. 그것은 대의명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통일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소한도라도 죄악이 많아 용서할 수 없는 불량분자만은 엄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동아일보 1945년 12월 30일자)

“일제 시대에 국내에 남아 있던 사람은 모두 친일파였고, 따라서 그들은 감옥에 가야 한다.”(Gayn 1948, 433)

이 말을 들은 국내파 민족주의자들은 아연실색했다. 김구의 주장에 대하여 여운형(呂運亨)은 “국내파 민족주의자의 고통을 모르는 언행”이라는 반발과 함께 제후의 희망을 버렸다.

아마도 김구를 추모하는 독자들이 김구에 관한 나의 몇 가지 글을 읽고 분노한 댓글을 달았던 것은 내가 “우리의 현대사에서 친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많지 않다”는 말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증류수에서는 물고기가 살 수 없다”고 항변한 분의 주장에 대해서도 나는 굳이 반론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공산권이 무너지고 1989년에 체코슬로바키아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하벨(Baclav Havel)의 말처럼, 장기간에 걸쳐 자행된 체계적 권력 남용과 외압 아래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이 체제에 묵종한 사회에서 최종적으로 누가 죄인이며 누가 그를 심판할 수 있는가(릭비 2007, 110~111)?

냉정하게 말하자면, 해방되자 이승만(李承晩)은 친일 재벌 장진영(張震英)의 돈암장(敦岩莊)에서 살았고, 김규식(金奎植)은 친일 재벌 민규식(閔奎植)의 삼청장(三清莊)에서 살았고, 김구는 일본 공사 다케조에 진이치로(竹添進一郎)의 별장이었던 금광 재벌 최창학(崔昌學)의 경교장(京橋莊)에서 살았고, 박헌영(朴憲永)은 함열(咸悅)의 친일 갑부 김해균(金海均)이 제공한 혜화장(惠化莊)에서 살았다(Gayn 1948, 361). 그런 모습은 “받아 마땅한 대접”이 아니었다.

해방정국에서 친일 논쟁은 이승만에게 너울을 씌우는 구실로 이용되었다. 그럴 만한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민당원들 가운데 친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친일 논쟁은 한민당으로서 더는 물러설 수 없는 화두였다. 그들은 역공하지 않는 한 더는 설 땅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실제로 이승만 초대 내각 각료 17명 가운데 친일 흠결이 있는 사람은 유진오(兪鎭五)와 윤치영(尹致暎) 두 사람뿐이었고, 한민당 사람은 김도연(金度演)뿐이었다. 가장 격노하여 반격에 나선 인물은 조병

옥(趙炳玉)이었다. 당시 정보망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는 정치판에서 내로라하는 사람들의 친일 비리를 꿰뚫고 있던 터라 할 말이 많았다. 그래서 나온 논리가 친일(pro-Jap)은 먹고 살다 보니 저지른 일(pro-Job)이었다는 것이다.

조병옥은 이어서 싱가포르가 함락되고 마닐라가 일본군에게 점령당하자 여운형과 안재홍(安在鴻)이 조선 총독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에게 불려 가 소위 대동아전쟁(大東亞戰爭)에 협력할 것과 황국신민이 되겠다고 맹세한 전력(前歷)을 공격하고, 김규식의 아들이 상해에서 일본군의 밀정으로 8년 동안 활약한 사실을 들추었다. 따라서 고의로 자기의 영달을 위하여 민족 운동을 방해하였거나 민족운동자들을 살해한 무리가 아니면 취업으로 인정하고 감싸야 한다고 강변하면서 그는 더 따져보겠느냐고 으름장을 놓았다(조병옥 1959, 173).

친일 인사들에 대하여 연민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식민지국의 신민으로 태어나 이름도 일본식으로 짓고 살던 당시 민중들에게서도 헌납은 이뤄지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1937년부터 1941년까지 조선인의 국방 헌납은 총액 1억1천432만4,255엔이었다.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헌납=친일”이요, “공출=수탈”이라는 도식이 지배해왔다. 그러나 헌납은 거물 친일파들만의 행위가 아니었으며, 조선군사후원연맹(편), 『半島の銃後陣』(1940)에 그 헌납 사례가 934건 소개되어 있다(김인호 2014).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으로서는 친일파 처단을 주장하는 김구나 좌익의 주장을 따를 수 없었다. 그는 이렇게 응수했다.

“민족 반역자나 친일파는 일소해야 하지만 지금은 우선 우리의 힘을 뭉쳐놓고 볼 일이다. 우리의 강토를 찾아낸 다음에 우리의 손으로 재판하여야 하며 지금은 누가 친일파이고 누가 반역자인지 모른다.”(Hoag 1970, 80; 신복룡 1991, 90; 2023, 227~228)

친일파를 처리할 수 없다는 이승만의 표면적인 구실은 그것이 끝내

국론을 혼란케 하여 통일을 지연시킬 뿐이라는 것이었다. 친일 논쟁에 하지(John R. Hodge)가 이승만의 편을 든 것도 한민당으로서는 힘이 되었다. 하지로서는 본디 친일파를 두둔할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니며, 한민당 밖에서는 영어를 알 만한 인물로서 허물없는 사람을 찾기 어려웠다는 데 애로가 있었다(Hoag 1970, 80; 신복룡 1991, 90; 2023, 227~228).

이승만과 김구의 관계에서 본다면 선명성이라는 점에서 김구가 우위에 섰던 것은 사실이다. 이는 이승만의 정치적 야망으로 볼 때 대중 동원이나 정치 자금 그리고 인물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지주나 매판자본가를 깨끗이 물리칠 수 없었음을 의미한다. 친일 청산을 주장하는 김구가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을 했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있었다. 때가 묻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숙청을 시도하면 새로운 사회 건설에 쓸 만한 사람이 부족한데 어찌랴?

지금 이 시대의 지배 계급 가운데 한말부터 일제 시대와 해방정국에 이르기까지 100여 년의 역사를 살아온 조상 3대 9족(친가·처가·외가)의 이력서와 호적/제적등본과 족보를 내놓고 “우리 집안은 정말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집안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열 사람의 의인만 살아 있었더라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았다면 창조주의 약속(『구약성서』 「창세기」 18: 32)은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이 아니었을까?

다시 국난이 온다면 나를 포함하여 우리는 모두 조국을 위해 죽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다. 거대한 국가 폭력 앞에서 한 개인이 저항하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흥망성쇠를 겪으면서 의인이 없었던 적도 없지만 역사적으로 애국자가 넘쳐나는 시대도 없었다. 꼭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 조국과 동포를 배신한 사람을 대상으로 정의를 추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망국의 원인을 몇 명의 친일파에게 추궁함으로써 망국이라는 거대 담론을 희

석(稀釋)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망국의 책임자이다. 천하의 흥망성쇠에는 필부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日知錄』 「正始」). 지금의 친일 논쟁은 “먼저 태어난 무리의 슬픔과 늦게 태어난 무리의 행운”이 빛은 같등이다. 우리의 망국사에는 분노만 분출할 뿐 역사에 대한 자성(自省)이나 회오(悔悟)가 없다.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는 여전히 “우리 자신의 힘으로 광복을 쟁취했다”고 가르치고 있다.

IV. 유럽의 경우

친일 청산의 문제는 프랑스의 나치 부역자 숙청과는 다르다. 나치가 철수한 직후부터 프랑스의 민족주의자들이 1만 명의 부역자를 처형 또는 사형(私刑)하고, “인민 재판”(crossroads justice)으로 4천 5백 명의 약식 처형이 이뤄졌다. 자식에게 우유를 제공한 독일 병정에게 몸을 허락했다는 이유로 사살하고 조리돌림한 처사가 바람직하였나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 “독일에 점령된 뒤 2주가 지나도록 신문의 발행을 계속한 것은, 논지를 불문하고 부역”이라는 드골(De Gaul)의 결정이 우리에게도 가능했을까?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점령 지역에 거주했던 대다수의 생존 전략은 영웅적인 순교보다 생존의 본능에 따랐다(릭비 2007, 18~19; 28).

노르웨이에서 25명, 덴마크에서 36명, 벨기에서 230명이 처형되었으며, 네덜란드에서는 920만 명의 인구 가운데 15만 명, 벨기에에서는 800만 명의 인구 가운데 7만 7천 명, 덴마크에서는 400만 명의 인구 가운데 1만 4천 명, 인구 400만 명인 노르웨이에서는 6만 3천 명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800만 명의 프랑스에서는 12만 명이 재판을 받았다(릭비 2007, 20~21; 43).

죄인을 고발하고 정죄할 때는 해묵은 원한이 부역보다 더 무겁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부역의 오명을 쓴 칼 야스퍼스(Karl Jaspers : 1946)는 이런 말을 했다.

“뉘른베르크재판은 범죄의 책임자를 가려내려는 의도보다는 ‘나는 당신들 처럼 죄짓지 않았음을 보여주려는 충동’도 크게 작용했다. 이는 독일인 모두가 범죄자로 비난받는 것을 피하는 장점이 있었다.”(릭비 2007, 5)

팔레스타인의 경우에는 점령군에 의해 죽은 사람보다 동족에게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아르헨티나 독재 7년 동안에 1-3만 명이 살해되거나 실종되었다(릭비 2007, 77; 176).

V. 어떻게 풀어야 하나?

그렇다면 해방 70년이 지나도록 아직 해결되지 않고 분파를 이루는 친일 부역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나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 일을 매듭짓는 것을 권고한다.

첫째, 당사자 또는 그 후손은 진정으로 참회하고 용서를 구한다. 정신적 외상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거의 고통을 거론하고 인정하며 여건이 좋아진 다음에는 “기억과 더불어 사는 법”이다(릭비 2007; 45). 예수께서 간음한 여인의 평결을 요구받았을 적에 그도 즉답을 못 하고 몸을 굽혀 땅에 뭍기 쓰기 시작했다. 율법학자와 바리사이파들이 줄곧 묻자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이르셨다.

“여러분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지시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땅에 무엇인가 썼다(『요한복음』 8: 1-11). 예수는 뭐라고 바닥에 썼을까? 성서 해석자들은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부탁한 이야기로 그치지만 내가 주목하는 것은 그가

다시 바닥에 앉아 무엇이라고 썼을까? 하는 대목이다. “나는 어떠했을까?”라고 쓴 것은 아닐까?

남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인권 침해 가해자들이 자신의 범죄 행위에 관하여 모든 것을 고백할 경우에 기소를 면제했다. 후회나 가책의 표현을 요구하지 않았다. 고백을 속속들이 다 듣고 알게 되면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마음은 더욱 비참해지기 마련이다(Chomsky 1987, 51).

부역자들에게도 할 말이 있을 것이다. 여운형(呂運亨)의 경우처럼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작은 친일을 했다고 고백한 사람도 있고(심산사상연구회 1994), 대학이나 신문사와 같은 더 큰 것을 지탱하려고 일본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김성수(金性洙)나 백관수(白寬洙)는 말했다(신복룡 2024, 183~202). 팔레스타인 부역자들의 대부분은 필요악이었다. 그들의 부역이 없었더라면 점령 치하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던 수많은 팔레스타인 가족의 삶은 더욱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그들은 빗나간 방식으로 공동체의 복지에 헌신하려고 했던 “애국적(?) 반역자”였다고 릭비는 설명하고 있다(릭비 2007, 173).

조직적인 부역자들은 어느 정도 거부감을 가지면서 적군에게 협조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통해 대중이나 특정 집단에 봉사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상주의적인 부역자들은 자신의 봉사로 말미암아 적군이 얻어가는 이익보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더 크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이럴 경우에 구체적인 동기가 다를 수 있지만 그들은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더 큰 공동체를 위하여 적군에게 협조했다. 점령 지역이나 억압 아래에서 삶을 생각할 때 유죄와 무죄의 차이는 정도의 문제이다.

식민지 지배 아래에서 극단적인 상황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유를 제시하며 도덕적·법률적 원칙을 위반한 사람들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릭비 2007, ix; 26). 나는 형법학자는 아니지만 “친일파에게는 공소시효가 없다”라는 논리에 법률적 하자가 없는지를

가끔 생각해 본다. 왜냐하면 그 행간에는 연좌제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학살과 같은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나치 치하나 붕괴 이전 공산 치하와 남미에서 저지른 반인륜 범죄의 추적과는 다소 다른 성격의 것이다. 과거만을 지향하는 기억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다 (릭비 2007, 1).

스페인의 경우를 보면 오히려 지식인들이 과거를 외면하기로 결정한 “망각의 협약”이 정치적 안정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프랑코(Franco)의 명예를 훼손하고, 군대와 보안 부대에 대한 숙청을 시도하면 쿠데타가 일어나리라고 믿을 만한 증거는 많았다. 그 문제를 현재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또 다른 유형 사태와 같등, 그리고 고통을 초래할 것 같았다. 그래서 원칙은 살리되 “망각”을 중요 도구로 이용했다. 그렇게 해서 프랑코 정권 아래에서의 부역자 사마린치(Juan Samarinch)도 용서를 받았다(릭비 2007, 3; 151; 168).

둘째, 친일의 댓가로 받은 일체의 반대급부를 환수한다. 그것은 속죄의 첫 단추이다. 자기들의 재산이 친일의 댓가가 아니라 선대부터 있었던 것이라고 강변할 수 있다. 그리고 일부는 재판에서 승소했다. 본디 대부(大富)는 망국의 시기에 나타난다(Mitchell 1939).¹⁾ 이와 관련해서는 남아프리카에서 있었던 다음의 일화를 인용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톰(Tom)과 버나드(Bernad)라는 두 소년이 있었다. 톰은 늘 버나드를 괴롭혔다. 어느 날 톰이 버나드의 자전거를 훔쳐 갔다. 버나드는 톰이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는 것을 보았으나 힘이 부족하여 따지지도 못했다. 그러더니 톰이 갑자기 버나드를 찾아와 손을 내밀면서 화해하고 과거를 흘려보내자고 손을 내밀었다. 그러자 버나드가 톰의 손을 내려다보며 물었다.

“그렇다면 내 자전거는 어찌 되는 거냐?”

그랬더니 톰이 말했다.

1) Margaret M. Mitchell, *Gone with the Wind*(1939)에서 버틀러 대위(Captain Butler)의 충고 : “There are two times for making big money. One is on the upholding of a country, The other is in its destruction. Slow money on the upholding, Fast money in its crack-up.”

“나는 지금 자전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그저 화해하고 싶을 뿐이야.”²⁾

이것이 유명한 “남아프리카의 자전거 화해 이야기”(Bicycle reconciliation story in South Africa)이다. 국가는 국가들 사이의 화해를 위해 자신의 손실과 불의를 수용하라고 큰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요청한다. 그러나 자전거는 돌려주지 않은 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갈 수는 없다. 자전거를 되찾지 못하는 한, 화해는 이뤄질 수 없다.

셋째, 국민적 합의로 일몰제(sunset law)를 제정한다. 세상의 매듭을 푸는 데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잊어버려”라는 것이다. 그러나 말이 쉽지, 그 아픔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원효대사(元曉大師)가 한 때 수행한 적이 있는 내 고향 괴산 군자산(君子山)에는 이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어느 날 원효가 상 좌중과 길을 건다가 증도에 개울을 만났다. 마침 장마철이어서 물이 불어 건너기가 어려웠다. 옷을 입고 건너자니 물이 깊어 옷이 젖을 지경이었고, 옷을 벗고 건너자니 그리 깊지는 않았다. 그런데 원효는 서슴없이 옷을 벗더니 아랫도리를 다 드러내고 물을 건너려 했다. 마침 그때 옆에는 젊은 여인이 난감하게 서 있었다. 원효는 주저 없이 그 아낙을 업고 물을 건넜다. 내를 건너 저편에 이른 원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옷을 입고 길을 걸었다. 이때 따라오던 상 좌중이 원효에게 말씀을 드렸다.

“스님, 이제 저는 스님의 곁을 떠나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출가한 스님이 벌거벗은 몸으로 젊은 여인을 업고 나를 건넜으니 계울에 어긋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원효가 상좌 중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아직도 그 여인을 업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나?”(신복룡 2021b)

2) “Giving Back the Bike : Reconciliation’s Promise,” June 2000; <https://www.culturalsurvival.org/publications/cultural-survival-quarterly/giving-back-bike-reconciliations-promise>; Martha Minow, *Memory and Hate*? 1999.

망국의 죄인들을 잊을 수는 없지만 이제는 내려놓고 가자. 카에사르(Julius Caesar)가 『이탈리아 내전사』(De Bello Civili)에서 말한 것처럼,

“강을 건너 다음에는 배를 강변에 두고 가야 한다.”

(*Postquam nave transiit flumen, navis relinquenda est in flumine*)

이제는 우리도 우익이나 좌익이 저지른 수많은 잘못에 대하여 정직하고 자유롭게 고백하고 사죄할 만큼 성숙하지 않았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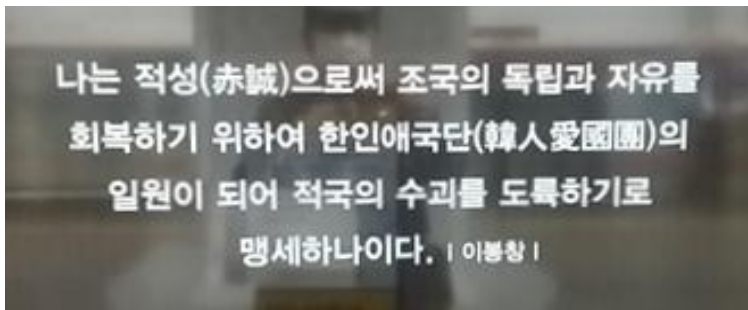
넷째, 연좌제를 배제한다. 친일 이야기를 하면서 박정희(朴正熙)를 거론하는 의견이 있었다. 친일파가 정권을 잡아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졌다는 논리이다. 박정희는 육군 중위의 몸으로 일본 군대에서 복무했다. 없었더라면 좋았을 일이니, 허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식민지에 태어난 젊은이가 겪어야 할 아픔(karma)이었다. 나는 그를 두둔할 뜻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육군 중위가 친일파라면 그 술한 한국인 육군 중위 가운데 왜 하필이면 박정희만 문제가 될까? 육군 중위가 친일을 했으면 얼마나 악독하게 했을 것이며, 그 뒷사람들의 친일은 왜 묻지 않고 박정희의 친일만 문제가 되는가? 그의 딸이 대통령이 아니었더라면 어땠을까?

실제로 친일의 죄상을 따지자면 중위보다 오장(伍長)이 더 악랄했다. 진보 진영에 포진하고 있는 오장의 자녀들이 중위의 자식을 친일파라고 배척하는 것은 무지이며 코믹하다. 박정희가 훗날 대통령이 되지 않고 중위로 생애를 마쳤더라도 그의 행적은 친일의 멍에를 썼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해방 이후의 행적에 따라 해방 이전의 행적을 논의하는 것은 당사자나 그 자식들에게 주홍 글씨를 써넣는 작업의 성격이 짙다. 박정희의 정치적 과오를 물으려면 유신 시절의 반민주적 통치를 논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친일의 과오를 거론하는 것은 오히려 그의 과오를 빗나가게 겨냥하는 것이다.

VI. 씻김굿

과거사 청산은 당사자에 대한 “할퀴기의 역사”(history of scratch)가 되어서는 안 된다(릭비 2007, 86). 그런 식이라면 일본 정부와 지주에게 세금과 소작료를 지불하고 부역(賦役)한 나와 귀하의 아버지도 친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림 3〉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차량의 슬라이딩 도어에 새겨진 항일 문구

위의 사진을 보자.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의 슬라이딩 도어에 새겨진 이봉창(李奉昌) 의사의 항일 문구이다. “도륙”(屠戮)이라는 문구가 눈길을 끈다. 도륙이라 함은 백정이 소나 돼지를 잡을 때 각(脚)을 뜨고 살을 발라내는 것을 뜻한다. 일제 시대의 우국지사들로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말을 쓰는 것이 국가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를 돌아볼 때이다. 더욱이 그 위치가 일본대사관 앞이고, “그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그곳에 세웠다.”는 지하철공사의 답변은 온당하지 않다. 일본 도쿄(東京) 긴자(銀座) 역에는 “조센징 저며 죽이자”는 슬라이딩 도어가 없다.

그러므로 망국의 문제는 멀리 맹자(孟子)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 그 나라가 스스로 멸망할 짓을 저지른 뒤에 다른 나라가 그를 멸망시킨다.”(『孟子』：離婁章句(上)：國必自伐而後人伐之)

강요에 따른 것이었든 자발적이었든, 우리는 그 시대를 살면서 모두 애국자였을 뿐, 암묵적으로 협조한 바는 없었을까?

참고문헌

- 김인호. 2014.12.20. 「일제 말 조선에서의 국방 헌납: 조선군사후원연맹(편), 『半島の銃後陣』(1940)을 중심으로. 한민족독립운동사학회 발표 논문.
- 신복룡. 2024. 『해방정국의 풍경』. 서울: 중앙북스.
- 신복룡(역). 2021a. 『플루타르코스영웅전』(II). 「코리올라누스 편」 서울: 을유문화사.
- 신복룡. 2021b. 『한국사에서의 전쟁과 평화』. 서울: 선인.
- 신복룡(편). 1991. 『한국분단사자료집』(II). 서울: 원주문화사.
- 신복룡·김원덕(역). 2023. 『한국분단보고서』(I). 서울: 선인.
- 신채호. 1997. 『조선상고사』(상). 서울: 삼성문화재단.
- 심산사상연구회. 1994. 『김창숙 문존』.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조병옥. 1959. 『나의 회고록』. 서울: 민교사.
- Carr. E. H. 1967. *What Is History?* London: Vintage.
- Caesar. 1992. *De Bello Civili*. Bost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omsky, N. 1987. *On Power and Ideology : The Managua Lectures*. Boston: Sout End Press.
- Gayn, Mark. 1948. *Japan Diary*. New York : William Sloane Associates.
- Hoag, C. L. 1970.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 War Policy and the First Year of Occupation: 1941~1946*. Washington, D.C.: OCMH at Department of the Army.
- Minow, Martha. 1999. *Memory and Hate?* Providence: Brown University.
- Plutarch's Lives, Coriolanus; 신복룡(역), 2021. 『플루타르코스영웅전』(II). 서울 : 을유문화사.
- Rigby, Andrew. 2001. *Justice and Reconciliation: After the Violation*.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릭비(저). 장원석(역). 2007. 『과거 청산의 비교정치학』. 제주: 온누리.

- Shakespeare, W. *Tempest*. Act. II. <https://www.sparknotes.com/shakespeare/tempest/section4/>
- Toynbee, Arnold J. 1973. *A Study of History*, Vo. IX(London : Oxford University).
- Weber, Max. 1977. 『직업으로서의 정치』. 서울: 박영사.
- 『구약성서』. 「창세기」
- 『논어』
- 『동아일보』 1945.12.30.
- 『金昌淑文存』. 1994. 서울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孟子』
- 徐宗懋. 2023. 『日帝朝鮮 稀貴 寫真集: 1910-1945』. 臺北 : 新世語文化有限公司.
- 顧炎武. 『日知錄』: 「正始」

Pro-Japanese Controversy in Korean Society, the carma, That Must Be Shaken Off

Shin, Bok-ryong*

Abstract

This essay reflects on the ongoing disputes surrounding pro-Japanese collaboration, 80 years after Korea's Liberation.

At this point in time, few can claim to be entirely free from the responsibility associated with pro-Japanese collaboration. The debate primarily stems from differing perspectives on Japan's colonial rule, contrasting those born after Liberation with those who lived through the era. It is undeniable that among the collaborators, some were self-serving and anti-nationalist. However, in many cases, collaboration with Japan was synonymous with securing jobs or survival. Criticism of pro-Japanese collaborators should not become merely “a history of scratching old wounds.”

To address this issue, several measures should be undertaken:

First, individuals who engaged in pro-Japanese activities or their descendants must sincerely repent and seek forgiveness from the public. Second, any compensation obtained through pro-Japanese activities must be recovered. Third, a “sunset law”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national consensus to provide a definitive resolution. Lastly, the principle of guilt by association must be eliminated to ensure fairness.

To conclude, we should reflect on Mencius' teachings regarding the downfall of nations: “When a nation perishes, it is because it has caused its own ruin before external forces destroyed it.” Addressing this issue requires a return to introspection and a collective effort to reconcile the vestiges of colonial history.

Keywords : colonial rule, pro-Japanese collaboration, liquidation of pro-Japanese legacies, remnants of pro-Japanese influence within us

* Professor Emeritus,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Konkuk University, shinbokryong@naver.com

❖ 시민정치연구 ❖

Journal of Civic Politics